

전략연구 2019-14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충남의 대응전략

오대원

연구 요약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확립해 왔으나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으로 상징되는 국제금융질서에 비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형성되는 국제무역질서는 협정 참여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질서 확립이 쉽지 않음

-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여전히 미국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나 새로운 국제 무역갈등과 그 조정이 구체화되면 이는 곧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나타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다극체제로의 전이현상이 심화되는 중
 - 특히 최근 미중무역분쟁은 워싱턴컨센서스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무역주의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와 동북아 무역질서도 급변하는 중
 - 미국이 20세기 들어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은 더욱 막강해졌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에 기반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상업적 기술에 있어서도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부상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
 -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21 세기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한 판의 대결로 볼 수 있음

동북아 질서변화에 일본과 한국의 주도권 다툼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무역 전쟁의 한일관계 버전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2019.7 한국의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통해 동북아지역 한일 주도권 다툼의 포문을 열었음
-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및 WTO제소 조치에 따라 한일 간 무역분쟁은 시작되었으며 이로서 동북아지역 주요 당사국인 한미일중의 경제전쟁이 시작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2019.7.2.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성이 진행됨

충남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조정 대응방안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배경 위에 이와 같은 한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

- 충남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 변화가 글로벌 정치경제역학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 재조정 과정임을 파악하여 향후 도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 외교, 안보질서 변화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동기와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해당 외부충격에 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및 경제구조를 고려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도출
 -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 및 미중 갈등 증폭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시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충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및 한일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동기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향후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안에서 충청남도의 전략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동북아 국제질서변화 분석	3
1. 미중무역전쟁 및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3
2.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영향	6
3.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가 일본수출규제에 준 영향	11
제3장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 분석	13
1.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한일 간 경제산업구조 분석	13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의존관계	20
3. 일본 수출규제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29
제4장 동북아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45
1. 충남지역 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영향	45
2. 충남지역 경제에 주는 시사점	50
〈부표 1〉 WIOD 산업코드와 산업명	51
〈부표 2〉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최종재(소비 및 자본재) 조달 구조(2014) ...	53
참고문헌	55

표 목차

〈표 3-1〉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16
〈표 3-2〉 한일 양국의 생산과정 상 중간재 조달구조(2014)	20
〈표 3-3〉 한국과 일본의 소비와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국내외 조달 구조(2014)	23
〈표 3-4〉 한국 제조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23
〈표 3-5〉 한국 주요 서비스업 생산물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24
〈표 3-6〉 일본 제조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25
〈표 3-7〉 일본 주요 서비스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25
〈표 3-8〉 한일 양국의 소비 및 투자 수요에 대한 국가별 조달구조(2014)	26
〈표 3-9〉 주요국의 총생산(중간재+최종재)에 대한 국가별 수요구조(2014)	27
〈표 3-10〉 한일 양국의 중간재 생산에 대한 국가별 수요구조(2014)	28
〈표 3-11〉 한일 양국의 부가가치 상호의존관계 및 세계경제의 영향력	33
〈표 3-12〉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각국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35
〈표 3-13〉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양국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37
〈표 3-14〉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양국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40
〈표 4-1〉 충남지역 수출입 증감률	48

그림 목차

〈그림 3-1〉 한일 경제규모 격차 감소 추이	17
〈그림 3-2〉 한일 양국의 세계 경제대비 비중 변화 추이	17
〈그림 3-3〉 한일 1인당 소득 격차 감소 추이	18
〈그림 3-4〉 한일 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18
〈그림 3-5〉 한일 고기술 수출액 격차 변화 추이	19
〈그림 3-6〉 한일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추이	19
〈그림 4-1〉 충남지역 산업 구조	46
〈그림 4-2〉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47
〈그림 4-3〉 충남지역 수출입 증감률 및 수출입차	47
〈그림 4-4〉 국가별 수출현황(2017년)	49

제1장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균열을 잠재적 패권 도전 국가들이 매립해가는 다극체제로의 전이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특히 최근 미중무역분쟁은 워싱턴컨센서스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무역주의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도 급변하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2019.7.2.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우리 정부는 2019.8.22. 한일안보동맹의 균열을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 및 미중갈등 증폭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시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충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동북아 역사, 외교, 안보질서 변화 및 한일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동기,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향후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안에서 충청남도의 전략 과제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IMF 및 World Bank의 쌍두마차를 대표로 하는 국제금융질서에 비하여 국제무역질서는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정 참여국 간에 이해다툼으로 인하여 확실한 구조화가 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는 새로운 무역갈등과 조정 양상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양상도 미중 간 무역갈등을 주요 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등 역내 국가들의 대처 과정에서 무역분쟁의 형태로 드러난다.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20세기 이후 산업 주도권을 잡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패권은 막강해졌는데 이는 군사력에 단순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기반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미국은 튼튼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배경으로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21세기 들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 21세기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동북아 국제질서변화에 일본과 한국의 역내주도권 분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일판 무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의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용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8월에는 안보물자 수출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통해 동북아지역 주도권 다툼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맞대응 및 WTO제소 조치에 따라 한일 간 무역분쟁은 격화되었으며 이로써 동북아지역 주요 당사국인 한미일중의 경제전쟁이 무역분쟁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충남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조정 대응방안은 동북아국제질서 변화의 거대담론의 배경 위에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충남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변화가 글로벌 정치경제역학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 재조정 과정임을 파악하여 향후 도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충남산업과 일본 중국 등 인접지역 산업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미중기술패권 다툼으로 인한 영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 외교, 안보질서 변화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동기와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해당 외부충격에 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및 경제구조를 고려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 동북아 국제질서변화 분석

1. 미중무역전쟁 및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중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 문명국가이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국가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류의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였다.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나침반, 화약, 제지, 인쇄술 모두 고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¹⁾ 18세기 이후 영국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통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동양을 추월하고 서양 문명발달을 선도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식민지 무역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뒤이어 미국이 20세기 들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산업혁명 결과 경제패권 다툼의 각축전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퇴조와 미국의 패권시대가 열렸다. 이는 단순히 각국의 군사력 격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혁명과 산업 주도권에 기반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제조업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IT기술의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튼튼한 기초과학과 최강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부상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한데 이어 AI 및 5G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경쟁자로 등장하자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중국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바로 21세기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한 판의 대결이다.

불과 몇 년 전 ‘대륙의 실수’로 우습게 봤던 샤오미(小米)는 이제 ‘대륙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설립 9년 만에

1) 150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최대 도시는 인구 60-70만의 베이징이었다. 당시 세계 10대 도시 중 파리만이 유럽에 있었고 그 인구도 20만이 되지 않는 도시였으며 런던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1900년에 이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런던은 650만 인구를 자랑하는 국제적 거대도시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 도시 10개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도쿄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니얼 퍼거슨, 『시빌라이제이션: 서양과 나머지 세계(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21세기 북스, 2011, p. 43.

샤오미는 468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합류했다.²⁾ 샤오미 이외에도 준비된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들은 줄을 서고 있다.³⁾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강국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 더 이상 모조품(짝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정제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굴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업 굴기, 기술 굴기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⁴⁾를 불공정한 산업정책의 예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기술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법적 근거로 미 통상법 301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를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이고 실질적 이유는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의 산업기술과 경제력이다.⁵⁾ 그러므로 미중 통상분쟁은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⁶⁾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2일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측 입장을 잘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2018년 9월의 백서에 이어 두 번째 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양보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2) <https://fortune.com/global500/2019/>

3) 중국 기업 전문 조사기관 후룬 연구소(Hurun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186개로 미국의 136개를 추월했다. 2018년에만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97개로 3.8일에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http://www.chinadaily.com.cn/a/201901/28/WS5c4ead1da3106c65c34e6dfc.html>

4) 중국은 중국산 제품을 대량 수출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지만,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글로벌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도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는 이치훈 오대원(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5) 특히 중국의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중국을 흠집 낼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사안이다. 중국의 기술탈취를 거의 절도 수준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과 사이버 보안을 문제 삼고 있다. 미 의회의 탄핵 정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의회에서 친중 인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왕윤중 2019)

6)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협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특히 협정문의 문구 하나 하나를 가지고도 기(氣)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아직도 무역협상의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든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만큼 2단계 협상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산업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영역에서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단계 협상 타결은 어려움에 처한 포괄적 타결 대신에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노력한다는 “선이난후(先易亂後)”의 자세로 미중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왕윤중, 「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1-40, 2019.)

의지를 보이고 있다(성균중국연구소 2019).⁷⁾ 결국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과정에서 무역적자를 들먹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박용이고,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진정한 속셈이다. 비록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는 휴전일 뿐 미국의 중국 견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패권은 패권국의 산업기술 우위에 기초한 생산력이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기술과 맞바꾸는 강제 기술이전 전략의 금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한 산업보조금의 금지 등을 요구하며 중국 산업정책의 근간을 구성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⁸⁾

미중무역전쟁은 무역분쟁과 기술분쟁 및 글로벌질서 재편 등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중 간 관세전쟁으로 시작하여 기술전쟁, 환율전쟁, 안보전쟁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은 2020년 1월에 1단계 무역합의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 보인다.⁹⁾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모두 경제적 피해를 보고, 세계경제는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한 피로가 쌓였다.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축소균형이 되었고, 미중 간 이어지는 관세폭탄과 환율전쟁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쳤다. 결국은 중국이 견딜 수 없어 항복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 패권다툼으로 인지하고 지구전에 들어간 중국도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농산물에서 중국의 타겟팅이 되어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트럼프 지지기반인 애국 농민의 타격이 증가하고 원성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7) 「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성균중국연구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8) 왕윤중, 「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1-40, 2019.

9) 2018년부터 미중 통상분쟁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에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부과했다. 2019년 5월 9-10일 개최된 제11차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즉각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휴전을 선언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7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2차 미중 무역협상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농산물의 수입 재개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응이 없자 또다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다수의 소비재가 포함된 1,03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9월 1일 1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 상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고위급 협상에서 일단 더 이상 관세전쟁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비록 완전한 협상 타결은 아니지만 2019년 12월 1단계 딜(Phase one trade deal)의 합의에 이르렀다.

통해 국제무역질서의 단물을 빨아서 성장기반을 키웠다고 보아 이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WTO가 무력화되고 글로벌 자유무역질서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실물무역시장에서나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공급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했으나 중국이 미국을 대신 해서 패권국으로 올라서면 글로벌 공공재인 국제무역질서와 국제금융질서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소위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경고하는 견해도 있다(Nye Joseph, 2017). 미국이 패권국가의 지위를 너무 빨리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금융질서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무질서한 상황이 전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첨단산업과 경제력 등 경성권력(Hard Power) 측면에서 아무리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과 선진문화 등 연성권력(Soft Power)이 아직은 약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Nye Joseph, 2015).

2.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영향

미중 통상분쟁이 자유무역주의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신보호무역주의로 확대되어 동북아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북아지역 여타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양국의 관세전쟁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대중 관세 부과가 동북아지역이 포함된 글로벌 다자무역체제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WTO 무역체제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의 국제무역질서는 새로운 통상질서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 협상의 실패 이후 WTO 개혁논의가 진행되는 중인데 비록 164개국 회원국들이 서로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개혁 방향성 설정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현재의 WTO 체제로는 중국 등 신흥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보조금 문제 등 무역질서의 왜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

2019.1.16. 미국은 WTO의 자기선언방식(self-declared) 개도국 지위결정에 대하여 개도국 간 ‘발전의 격차(Development Divide)’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도국 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몇몇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거나 개도국을 졸업하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WTO 개혁 논의를 촉발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이 요구하는 지재권 및 보조금 등 산업정책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과 개도국 그룹이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요구한 WTO의 자기선언형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의 개선에 대해 중국, 인도 등 10개의 개도국들은 미국이 제시한 ‘발전의 격차(Development Divide)’를 개도국 간 격차가 아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로 재해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발전의 격차가 여전히 큼을 강조하며, 현행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개도국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이 바라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재정립 시도는 지속되는 중이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는 무엇인가? 미국이 NAFTA를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개정할 당시 미국이 희망하는 통상정책의 방향과 기준이 구체적인 협정문으로 드러난 바 있다. USMCA는 트럼프 정부의 국제무역질서 재정립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미국이 세워나갈 신 통상질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왕윤중 2019). 특히 USMCA 협정에 참여한 3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 참여국들이 해당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비시장경제 국가’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¹¹⁾

10) 2019.2.15일 미국은 WTO의 일부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거나 개도국을 졸업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때 4가지 개도국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둘째 G20 국가, 셋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넷째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해당되는 유일한 개도국이므로 WTO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1) 미국이 희망하는 통상질서가 새롭게 규범화된 것이 바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대체되어 나온

만일 향후에 NAFTA의 경우와 같이 한미 FTA 협정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USMCA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 중 한쪽을 택해야 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05년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중국을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이 '비시장경제'인 중국과 FTA를 유지하려했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당국이 미국의 그런 부당한 요구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을 감안한다면 동북아시아 국제무역질서 급변에 대한 우리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은 동북아국가 간 체결된 유일한 FTA협정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역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2002년 ASEAN+3 회담에서 제안한 후 산·학·관 공동협력연구를 거쳐 2013년 4월에야 공식협상을 시작하였고 2018년 12월 베이징에서 제14차 공식협상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미중무역전쟁의 격화로 동북아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국 모두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9년 11월에 이미 타결됨에 따라 한중일 FTA는 한중일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내무역자유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8년 10월 25-27일 7년 만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아베 총리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일 간 협력 증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단되었던 중일 간 통화스왑을 재개하면서 스왑 규모를 10배 늘려 300억 달러로

USMCA(USMexico- Canada Agreement)이다. 동 협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무역 협정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협정에는 TPP에서 합의한 수준으로 디지털 무역, 저작권 보호 및 생물의약품 자료 독점,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포함되었다. 또한 NAFTA와는 달리 부속협정이 아닌 협정문의 한 챕터로 노동 분야가 포함되었고,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특히 협정에 참여한 3개 국가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왕윤중 2019).

확대하였다. 또한 중일 양국이 제3국 인프라 투자에 공동 진출하기로 세부 52개 부문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일본이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물론 중일 관계는 한중FTA 관계와 달리 미일군사동맹,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 난징침략과 같은 역사 문제 등의 더 큰 장애물로 인해 상호신뢰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중통상분쟁이 격화될수록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되어 한중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중일 간 관계가 증진되는 가운데 동북아 국제무역질서에서 남은 문제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이다. 동북아 지역의 남은 하나의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0년대 이후 IT기술의 발달과 물류 혁신을 통한 운송비용의 절감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복잡하게 연결되어왔다(Baldwin 2016).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역시 9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자유무역의 진전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 및 국제분업구조 재편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른바 동북아 골든트라이앵글 GVC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내 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글로벌 분업구조의 제품 생산 단계에서 일본의 원자재 부품, 소재, 장비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한국이 다양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동북아 공급사슬망(Supply Chain) 형성을 통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면서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이 지적하듯이 무역을 통한 국제분업이 세분화되는 현상(unbundling)이 확산되었다.¹²⁾ 200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통계에 의하면 역내 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중간재 부품의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것이다.¹³⁾ 최근의 동북아지역의 무역은 중국 중심의 GVC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Obashi and Kimura, 2018). 최근의 미중무역전쟁은 이처럼 심화된 동북아 지역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에 따라 오히려 한중일 무역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12) Baldwin, Richard,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3) Obashi Ayako and Fukunari Kimura, 2018, "Are Production Networks Passe in East Asia? Not Yet," *Asian Economic Papers* Vol. 17, Issue 3, pp. 86-107.

수출하는 중국의 최종재가 미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받는다면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글로벌 가치사슬 경로에 따라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이 기존의 동북아 한중일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한중일 FTA 등 지역 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강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동북아의 국제무역질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통상질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 내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중국과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은 대외충격에 우리나라보다 민감하지 않으므로 글로벌 가치사슬 충격을 분산할 경로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미중무역전쟁의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외부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은 부품 국산화 및 산업고도화를 통해 단순 가공무역 수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한중 GVC 구조에도 변화가 필연적이다. 한국은 중국내수시장에 대한 공급망으로 진화하는 한편 베트남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새롭게 형성되는 동아시아 GVC 구조로 확장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미중 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부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가 일본수출규제에 준 영향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은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어 왔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무협상도 추진되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가 한일 경제에 서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동북아 국제무역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인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수출제한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응에 따른 일본정부의 불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핵심 부품의 북한에 대한 밀수출 의혹 등 한국정부의 수출 관리 부실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한 표면적 배경 이외에도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층 집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슈의 필요성,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위한 한국과의 긴장관계 조성 등 대내적 요인 등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양국 간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한 수출제한은 단기적으로 양국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양국의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 상호불신 조장은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 및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미·일 3국 공조의 틀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내하면서까지 일본정부가 상기 조치를 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동북아시아 질서변화 과정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안보 강화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등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표면적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 해소와 자국기업 보호가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미국의 중국견제라는 국제정치경제학적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자국시장을 무기로 중국을 길들이고, 중국경제를 견제하고자 한다면, 일본은 자국의 부품소재를 무기로 한국을 길들이고, 한국경제를 견제 내지 통제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사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일본은 자국 소재부품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버리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만성적인 대중국 경상수지적자에 대응하여 대중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만성적인 대한국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두 경우에 있어 표면적 양상은 달라 보이나, 보다 큰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상대국에 대한 자국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다음 장에서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배경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일본제품에 불매운동 및 향후 한국의 ICT 관련 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선과 같은 일본 내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지역 내 일본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한국 견제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3장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한일 간 경제산업구조 분석

1) 한일 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본 연구는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의 배경과 내용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한국 수출통제의 의미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경제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 즉 일본의 대한국 무역제재의 배경을 양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한 제재가 한국과 일본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에서 시작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양국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양국 간 무역갈등의 부담 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가 나오는 시점에서 구로다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은 한국이 경제발전하는데 일본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야 하며, 일본이 준 3억 달러(한일협정 청구권 자금)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9.7.5.). 물론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았다(경상수지 등). 그러한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상호 경제관계를 통해서 각각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이익은 어떤 산업에 집중되어 있을까? 이러한 분석은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에 있어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볼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양국 간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관계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연구가 그리 활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양국 간 경제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김종화, 1998; 이홍배 2011),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산업의 상호의존관계(김종화, 1998; 이춘근, 2016, 박천익·정군우, 2007; 이홍배, 2009, 2017), 부품 및 소재산업에 있어서 협력(이홍배, 2011, 2016; 이시영 외, 2006), 한·일 FTA(강상인 외, 2004; 이창수 외, 2015; 이시영 외 2006), 한·일 수출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신현곤, 2004; 홍승린 외, 2017; 이재승 2015, 오태현, 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종화(1998)는 1990년대 한·일 국제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수출감응도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가 상대국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최종수요 증가가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근원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박천익·정군우(2007)는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1990, 1995, 2000)를 이용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산화율과 역내분업률 분석을 통해 한국은 전자기기부문(특히 반도체)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대신 역내분업률이 높고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밝혔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소폭 낮아지고 여타 역내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으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일본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의 국산화율이 매우 높고,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역내 각국에 대한 일본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홍배 외(2016)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분야인 소재부품산업에 있어서 한·일간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수입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1985-2010 기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축소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배(2017)는 국제산업연관표(1990, 2000, 2010)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중 박천익·정군우(2007), 이홍배(2017)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생산에 있어서 양국 간 의존관계(Production Fragmentation),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의존관계, 양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 양국 간 무역갈등 심화로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양국에 미칠 효과, 일본의 특정분야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의 수출감소가 한국과 일본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분석 자료가 기존 연구와 달리 2016년 발표된 세계투입산출표(2014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특정부문 수출 통제가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라 하겠다.

2) 한국과 일본경제의 상대적 위상 변화

양국 간 경제의 상대적 위상 변화는 다양한 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측면으로 GDP 규모 및 1인당 GDP, 국제경쟁력 측면으로 수출액, 산업기술적 측면으로 수출 중 하이테크제품 수출 및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R&D) 수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GDP 규모를 기준으로 한 양국 간 경제력 차이는 60년대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했던 70년대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서 70년대 말까지 일본의 GDP규모(명목기준)는 한국에 비해 29배나 되었다. GDP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 격차는 80년 이후 조금씩 축소되었으나 95년까지도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에 비해 10배 정도 컸다. 그러나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 격차는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표 3-1〉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Series Name	국가	단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GDP (실질)	JPN/KOR	배	N.A.	N.A.	N.A.	N.A.	N.A.	N.A.	7.6	5.4	4.4	3.7	3.0	2.8	2.7	2.7	2.6
	JPN/W	%	N.A.	N.A.	N.A.	N.A.	N.A.	N.A.	8.0	7.7	6.8	6.0	5.0	4.4	4.3	4.2	4.1
	KOR/W	%	N.A.	N.A.	N.A.	N.A.	N.A.	N.A.	1.1	1.4	1.5	1.6	1.6	1.6	1.6	1.6	1.6
GDP (명목 US\$)	JPN/KOR	배	11.2	29.1	23.6	24.0	17.0	14.0	11.2	9.8	8.7	5.3	5.2	3.2	3.5	3.2	3.1
	JPN/W	%	3.2	4.6	7.2	8.8	9.9	10.9	13.9	17.7	14.6	10.0	8.6	5.9	6.5	6.0	5.8
	KOR/W	%	0.3	0.2	0.3	0.4	0.6	0.8	1.2	1.8	1.7	1.9	1.7	1.8	1.9	1.9	1.9
1인당 GDP (명목 US\$)	JPN/KOR	배	3.0	8.5	7.3	7.6	5.6	4.7	3.9	3.5	3.2	2.0	2.0	1.3	1.4	1.3	1.3
1인당 GDP (실질)	JPN/KOR	배	N.A.	N.A.	N.A.	N.A.	N.A.	N.A.	2.6	2.0	1.6	1.4	1.2	1.1	1.1	1.1	1.1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명목 US\$)	JPN/KOR	배	45.8	43.0	21.4	13.0	7.8	7.1	4.5	3.4	2.6	2.0	1.6	1.2	1.3	1.3	N.A.
	JPN/W	%	3.0	4.2	5.7	6.2	6.3	8.5	7.4	7.6	6.6	5.2	4.5	3.6	3.8	3.8	N.A.
	KOR/W	%	0.1	0.1	0.3	0.5	0.8	1.2	1.6	2.2	2.5	2.6	2.9	2.9	2.9	2.9	2.8
고기술 수출액 (명목 US\$)	JPN/KOR	배	N.A.	N.A.	N.A.	N.A.	N.A.	N.A.	6.1	3.8	2.4	1.5	1.0	0.7	0.8	1.2	N.A.
제조업 수출 중 고기술수출 비중	JPN	%	N.A.	N.A.	N.A.	N.A.	N.A.	N.A.	24.2	26.5	28.7	23.0	18.0	16.8	16.2	13.8	N.A.
	KOR	%	N.A.	N.A.	N.A.	N.A.	N.A.	N.A.	18.0	26.0	35.1	32.5	29.5	26.8	26.6	14.2	N.A.
상품수출 중 ICT 비중	JPN	%	N.A.	N.A.	N.A.	N.A.	N.A.	N.A.	N.A.	N.A.	22.7	16.9	10.7	8.5	8.3	8.4	N.A.
	KOR	%	N.A.	N.A.	N.A.	N.A.	N.A.	N.A.	N.A.	N.A.	34.5	30.0	21.4	21.7	22.3	24.7	N.A.
서비스수출 중 ICT 비중	JPN	%	N.A.	N.A.	N.A.	N.A.	N.A.	N.A.	N.A.	N.A.	3.4	1.5	1.3	2.0	2.2	2.7	N.A.
	KOR	%	N.A.	N.A.	N.A.	N.A.	0.4	0.7	2.4	1.5	0.8	0.6	1.2	3.6	3.9	4.8	N.A.
GDP대비 R&D 비중	JPN	%	N.A.	N.A.	N.A.	N.A.	N.A.	N.A.	N.A.	N.A.	2.9	3.2	3.1	3.3	3.1	N.A.	N.A.
	KOR	%	N.A.	N.A.	N.A.	N.A.	N.A.	N.A.	N.A.	N.A.	2.2	2.6	3.5	4.2	4.2	N.A.	N.A.
R&D연구 인력 (백만명당)	JPN	명	N.A.	N.A.	N.A.	N.A.	N.A.	N.A.	N.A.	N.A.	5,078	5,304	5,103	5,173	5,210	N.A.	N.A.
	KOR	명	N.A.	N.A.	N.A.	N.A.	N.A.	N.A.	N.A.	N.A.	2,287	3,692	5,330	7,045	7,113	N.A.	N.A.
R&D기술 인력 (백만명당)	JPN	명	N.A.	N.A.	N.A.	N.A.	N.A.	N.A.	N.A.	N.A.	619	559	582	522	503	N.A.	N.A.
	KOR	명	N.A.	N.A.	N.A.	N.A.	N.A.	N.A.	N.A.	N.A.	447	539	960	1,218	1,232	N.A.	N.A.

주: KOR, JPN, W는 각각 한국, 일본, 세계를 의미. 실질GDP의 구매력평가(PPP)는 2011년 불변가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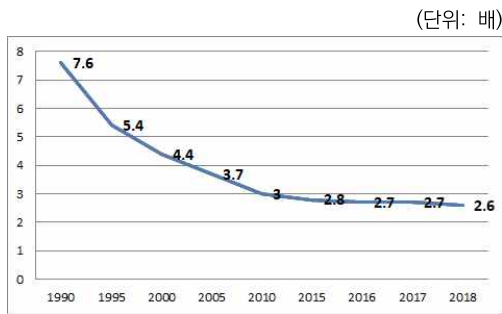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이용하여 계산.

〈표 3-1〉에서 보듯 1995년까지 한국의 10배에 달했던 일본의 GDP(명목기준)는 2005년에는 5배로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2014년에는 3배로 축소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한국의 3배이나 구매력평가기준(2011년 불변가격)으로는 2.6배 수준이다. GDP 규모에 있어서 양국간 격차 축소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 축소로 이어졌다. 1960년 일본의 1인당 GDP(명목)는 한국보다 3배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73년에는 10배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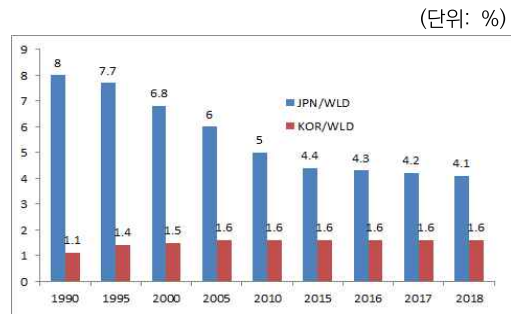
〈그림 3-1〉에서 보듯 1995년까지 한국의 10배에 달했던 일본의 GDP(명목기준)는 2005년에는 5배로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2014년에는 3배로 축소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한국의 3배이나 구매력평가기준(2011년 불변가격)으로는 2.6배 수준이다. GDP 규모에 있어서 양국 간 격차 축소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 축소로 이어졌다. 1960년 일본의 1인당 GDP(명목)는 한국보다 3배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73년에는 10배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그림 3-1〉 한일 경제규모 격차 감소 추이



주) 실질GDP의 한일(JPN/KOR) 비율(2011년 불변가격 PPP 기준)

〈그림 3-2〉 한일 양국의 세계 경제대비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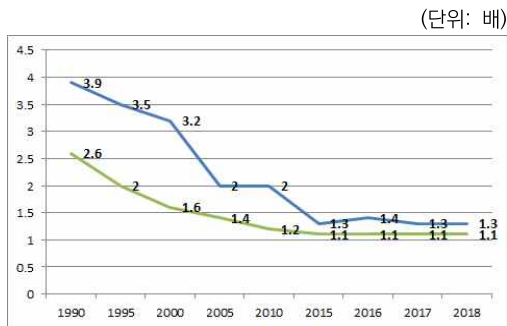


주) 세계 GDP 중 일본, 한국 비중(2011년 불변가격 PPP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보다 5~6배 정도 높았으나, 1989년에 4.3배로 축소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약 4배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에는 2배로까지 그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2018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3배로 한국과 거의 비슷해졌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양국 간 1인당 GDP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비슷해졌으며 2010년대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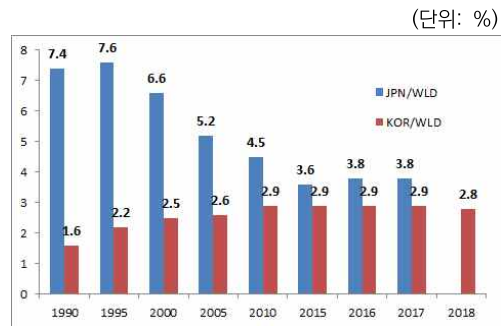
양국 간 이러한 경제력 격차 축소 추세는 수출액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1960년 일본의 수출액은 한국에 비해 48배나 많았으며 1962년에는 53배까지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후 점차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1971년 22배, 1976년 10배로 여전히 그 격차는 매우 컸다.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는 5배까지로 축소되었고, 2005년에는 2배까지로 축소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양국 수출액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일본 수출액은 한국의 1.3배 수준이다.

〈그림 3-3〉 한일 1인당 소득 격차 감소 추이



주) 1인당 실질GDP규모의 JPN/KOR 비율(2011년 불변 가격 PP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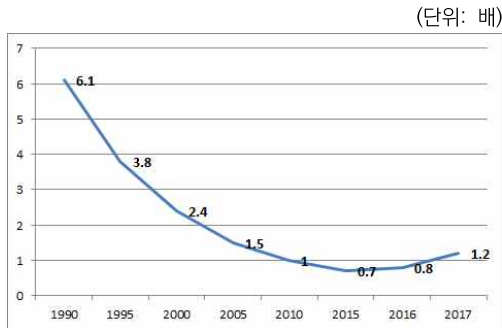
〈그림 3-4〉 한일 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주)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중 일본, 한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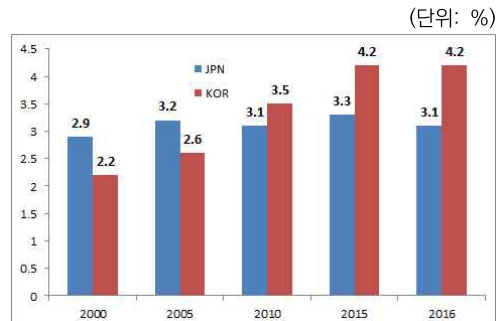
수출에 있어서 양국 간 격차 축소는 전체적인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 중 고기술 수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까지 고기술수출액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보다 6배 이상 많았으나, 2002년에는 2배까지로 그 격차가 축소되었고, 2005년부터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3~2016년 기간에는 양국 간 격차는 역전되기도 했다. 2017년 일본의 고기술수출액은 한국의 1.2배로 양국 간 격차는 매우 작다. 이러한 양상은 양국의 수출구조에서도 발견된다. 양국의 수출에서 고기술수출액 비중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한국의 동 비중이 더 빠르게 확대되어 1998년에 27.1%로 일본의 비중(26.2%)을 앞질렀다. 고기술산업 중 대표적 산업인 ICT산업의 수출액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연구개발(R&D)관련 주요 지표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GDP대비 연구개발(R&D)투자액과 인력비율 역시 2010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우위에 있었으나 2010년 이후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한일 고기술 수출액
격차 변화 추이



주) 고기술 수출액(명목가격US\$)의 JPN/KOR 비율

〈그림 3-6〉 한일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추이



주) 연구개발비 투자액의 GDP대비 비중

이처럼 주요 경제지표에서 양국 간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고, 일부 지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경제가 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져서 추격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지역 경제에서 일본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한국에게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G2에 올라서면서 미국과의 패권다툼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추격은 과거 오랫동안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해왔던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있어서 일본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일본의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자국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내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2019년도 7월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서론에서 논의한 일본의 국내적 정치상황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국 간 경제적 격차가 크게 축소된 현 상황에서, 과연 한국경제에 있어서 일본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으로 앞에서 언급한 국제정치경제학적 측면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에 있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거나, 일본이 한국경제의 핵심 분야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의존관계

양국 간 경제적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 하락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역시 축소되었을까?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1) 생산에 있어서 양국 간 의존관계

〈표 3-2〉 한일 양국의 생산과정 상 중간재 조달구조(2014)

구분	일본		한국	
	중간재수요	중간재공급	중간재수요	중간재공급
브라질	0.2	0.2	0.2	0.5
중국	1.6	0.4	3.7	0.5
독일	0.3	0.4	0.7	0.2
프랑스	0.1	0.2	0.2	0.1
영국	0.2	0.2	0.3	0.2
인도	0.1	0.3	0.2	0.5
일본	85.3	85.3	2.4	0.7

구분	일본		한국	
	중간재수요	중간재공급	중간재수요	중간재공급
한국	0.7	2.4	78.1	78.1
러시아	0.5	0.2	0.3	0.5
미국	1.0	0.5	1.5	0.3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dabase 이용 계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의존도 관계를 양국 생산과정의 총투입액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으며 한일양국의 생산 총투입액에 있어서 국가별 투입액 비중을 보여준다. <표 3-2>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전산업(WIOD 기준 56개 산업)의 생산 총투입액 중 78.1%를 자체 조달하였으며, 3.7%를 중국, 2.4%를 일본, 1.5%를 미국에서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생산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2.4%로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생산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주요국¹⁴⁾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2014년 전산업의 생산 총투입액 중 85.3%를 자체 조달하였으며, 1.6%를 중국, 1.0%를 미국, 0.7%를 한국에서 조달하였다. 즉,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생산에 있어서 해외의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조달 차질에 따른 생산에 있어 어려움이 한국에 비해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요국 중 생산과정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생산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어떤 국가들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생산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갈등에 의해 양국 간 중간재 교역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의 정도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는 <표 3-4>와 <표 3-5>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과정 중 필요한 중간재의 국내외 조달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생산 의존도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14)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선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한국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해외의존도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높은데, 2014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 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특히 고무·플라스틱 제조업(13), 조립금속 제조업(기계 및 설비 제외)(16), 컴퓨터·전자·광학제조업(17), 전기설비 제조업(18) 등에 있어서 높았다. 한국 생산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서도 높았는데, 예를 들면 건설(27),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4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26), 과학 연구개발(47)에 있어서 높았다.

한편 일본의 생산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낮았다(〈표 6〉, 〈표 7〉 참조). 일본의 생산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는 한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한국 순이었다. 하지만 일부 산업, 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 컴퓨터·전자·광학제조업(17), 전기설비 제조업(18), 조립금속 제조업(기계 및 설비 제외)(16), (19)에 있어서 일본 생산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 보다 대체로 높지만, 주요 산업에 있어서는 양국 간 의존도가 상호간에 높았다. 이는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상호간 중간재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생산에도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 간 상호 높은 의존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 간 무역갈등은 각국의 생산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본재는 중간재는 아니지만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최종재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 간 생산에 있어서 의존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자본재 조달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3〉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 최종재 수요의 국내외 조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해외의존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2014년 기준 1.5%로 중국(3.3%), 독일(2.2%), 미국(2.1%) 다음으로 높았다. 즉, 2014년 기준으로 중간재에 있어서와 달리 자본재 조달에 있어서는 한국은 일본보다는 독일과 미국에 더 의존하고 있다. 한편 고정자본

형성에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4.8%)과 미국(0.8%)에 이어 0.7%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낮았다. 즉 생산과정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중간재에 있어서 보다는 자본재에 있어서 더 낮기는 하나,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높았다.

〈표 3-3〉 한국과 일본의 소비와 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국내외 조달 구조(2014)

(단위: %)

구분	일본			한국		
	가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가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브라질	0.1	0.0	0.0	0.1	0.0	0.0
중국	2.2	0.0	4.8	2.3	0.0	3.3
독일	0.2	0.0	0.7	0.6	0.0	2.2
프랑스	0.2	0.0	0.2	0.2	0.0	1.1
영국	0.1	0.0	0.1	0.2	0.0	0.4
인도	0.1	0.0	0.0	0.1	0.0	0.0
일본	93.2	99.9	90.3	0.4	0.0	1.5
한국	0.3	0.0	0.7	90.1	99.8	85.8
러시아	0.1	0.0	0.0	0.2	0.0	0.0
미국	0.5	0.0	0.8	0.9	0.0	2.1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표 3-4〉 한국 제조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구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브라질	1.1	0.2	0.1	0.4	0.2	0.6	0.1	0.2	0.2	0.1	0.2	0.1	0.0	0.1	0.1	0.0	0.1	0.1
중국	1.5	4.2	3.2	2.0	1.9	0.6	2.8	2.8	3.6	4.8	4.2	5.1	9.7	5.4	4.9	4.3	4.9	4.9
독일	0.2	0.5	0.5	0.5	0.5	0.1	0.9	1.0	1.2	0.6	0.6	0.9	0.9	1.0	1.4	1.2	1.2	0.7
프랑스	0.1	0.2	0.1	0.3	0.2	0.3	0.2	0.3	0.3	0.2	0.2	0.3	0.2	0.3	0.4	0.3	0.4	0.2
영국	0.1	0.1	0.1	0.1	0.1	1.0	0.1	0.3	0.2	0.3	0.5	0.3	0.2	0.3	0.4	0.2	1.0	0.2
인도	0.4	0.4	0.1	0.1	0.1	0.2	0.5	0.2	0.3	0.2	0.4	0.4	0.1	0.2	0.2	0.2	0.2	0.2
일본	0.5	1.6	1.0	2.0	1.9	0.6	3.9	2.1	4.7	2.9	3.7	4.7	4.1	4.0	3.4	2.8	3.3	2.5

구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한국	87.9	86.3	80.2	86.0	88.3	23.7	78.8	86.0	81.1	75.4	67.1	80.1	72.4	81.7	81.6	85.5	80.1	83.7
러시아	0.1	0.1	0.3	0.4	0.4	2.1	0.4	0.1	0.1	0.4	0.9	0.4	0.0	0.2	0.1	0.1	0.2	0.2
미국	2.4	1.0	0.9	1.7	1.5	0.8	1.9	1.9	2.1	1.3	0.8	1.1	1.9	1.2	1.6	1.3	2.6	1.1
기타	5.7	5.4	13.6	6.4	4.9	70.0	10.4	5.2	6.1	13.8	21.4	6.6	10.3	5.7	5.9	4.1	6.1	6.2
(호주)	0.8	0.3	0.6	0.1	0.1	5.5	0.3	0.3	0.3	0.8	1.7	0.5	0.1	0.2	0.2	0.2	0.2	0.3

주: 산업코드별 산업명은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WIOD)이용 계산

<표 3-5> 한국 주요 서비스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구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피라미드	0.3	0.0	0.1	0.1	0.1	0.1	0.1	0.0	0.0	0.0	0.1	0.1	0.6	0.2	0.0	0.1	0.0	0.0	0.0	0.0	0.0	0.0	0.1	0.1	0.0	0.1	0.1	0.0	0.1	0.1	0.1
중국어	0.8	2.1	2.5	5.3	1.3	1.3	1.3	1.2	1.0	1.1	1.9	1.4	1.4	1.9	1.0	2.0	4.9	1.4	1.1	1.6	0.2	1.5	2.3	3.4	0.1	2.0	1.7	1.3	1.8	2.3	2.3
일본	0.2	0.6	0.6	1.0	0.3	0.3	0.3	0.3	0.2	0.2	0.4	0.2	0.2	0.4	0.2	0.4	0.6	0.3	0.3	0.3	0.1	0.2	0.4	0.6	0.1	0.4	0.4	0.3	0.3	0.8	0.6
프랑스	0.2	0.2	0.2	0.3	0.1	0.1	0.1	0.1	0.2	0.3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0.0	0.0	0.1	0.2	0.1	0.1	0.1	0.1	0.1	0.3	0.2
영국	0.6	0.2	0.4	0.3	0.3	0.3	0.3	0.2	0.3	1.1	0.4	0.3	0.1	0.2	0.1	0.4	0.6	0.5	0.6	0.6	0.2	0.1	0.2	0.3	0.0	0.3	0.2	0.4	0.2	0.4	0.2
인도	0.1	0.1	0.2	0.3	0.1	0.1	0.1	0.4	0.5	0.4	0.1	0.1	0.2	0.1	0.0	0.0	0.1	0.0	0.0	0.0	0.0	0.1	0.2	0.1	0.0	0.1	0.1	0.1	0.1	0.1	0.1
독일	0.7	1.6	2.1	3.8	0.7	0.7	0.7	1.3	0.9	0.9	1.0	0.6	0.3	1.1	0.3	1.0	2.1	0.5	0.4	0.5	0.1	0.4	1.1	1.8	0.0	1.2	1.3	0.6	0.7	0.9	1.5
한국	52.9	90.3	86.0	80.6	90.2	90.2	90.2	83.8	78.7	77.8	89.0	89.1	91.0	89.1	95.2	87.4	78.5	89.9	90.4	90.3	97.3	92.9	88.3	86.3	98.2	89.9	90.4	91.1	90.3	88.8	89.5
러시아	1.3	0.1	0.1	0.2	0.1	0.1	0.1	0.5	0.5	0.5	0.1	0.1	0.1	0.2	0.0	0.0	0.0	0.0	0.0	0.0	0.0	0.1	0.1	0.1	0.0	0.1	0.1	0.1	0.1	0.0	0.1
미국	0.7	1.0	1.4	1.8	1.5	1.5	1.5	0.9	1.9	3.1	1.2	1.5	1.1	1.9	0.6	2.1	2.1	1.8	2.3	1.6	0.2	0.8	1.6	1.6	0.2	1.3	1.0	1.3	1.1	1.4	1.0
기타	42.0	3.8	6.4	6.4	5.3	5.4	5.4	11.1	15.8	14.4	5.8	6.4	4.8	4.8	2.4	6.4	10.9	5.4	4.7	5.0	1.8	3.8	5.7	5.5	1.2	4.7	4.5	4.8	5.3	4.8	4.4

주: 산업코드별 산업명은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WIOD)이용 계산

〈표 3-6〉 일본 제조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구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브라질	0.5	0.1	0.1	0.1	0.1	0.7	0.1	0.1	0.1	0.2	0.5	0.2	0.0	0.1	0.1	0.1	0.1	0.2
중국	1.0	3.0	1.6	1.2	1.1	0.1	2.2	1.3	2.4	1.1	1.1	2.7	5.3	5.7	5.1	2.8	2.3	2.2
독일	0.1	0.3	0.2	0.2	0.2	0.0	0.7	0.6	0.6	0.2	0.2	0.4	0.3	0.5	0.6	0.6	0.4	0.3
프랑스	0.1	0.1	0.1	0.1	0.1	0.0	0.3	0.3	0.2	0.1	0.1	0.1	0.1	0.1	0.2	0.2	0.2	0.1
영국	0.1	0.2	0.0	0.1	0.1	0.0	0.2	0.2	0.2	0.1	0.2	0.2	0.2	0.2	0.2	0.1	1.4	0.1
인도	0.1	0.2	0.0	0.0	0.0	0.1	0.4	0.1	0.1	0.1	0.1	0.1	0.0	0.1	0.1	0.1	0.1	0.1
일본	90.5	88.4	84.2	90.2	93.3	16.5	82.5	91.0	88.3	71.9	71.8	89.0	81.0	83.3	85.1	89.8	84.1	88.5
한국	0.3	1.2	0.2	0.4	0.5	0.1	1.8	0.6	1.0	0.5	1.2	1.4	1.6	1.6	1.4	0.8	0.9	0.7
러시아	0.0	0.0	0.3	0.2	0.1	5.5	0.2	0.0	0.0	1.5	1.8	0.3	0.1	0.2	0.2	0.1	0.2	0.2
미국	2.1	0.9	1.7	1.3	1.1	0.6	2.1	1.5	1.5	0.7	0.5	0.7	0.8	0.8	1.1	0.5	5.4	0.9
기타	5.1	5.5	11.6	6.1	3.4	76.3	9.5	4.4	5.5	23.6	22.5	4.9	10.6	7.3	5.8	5.0	4.9	6.7
(호주)	0.5	0.2	0.5	0.5	0.1	11.3	0.6	0.1	0.1	3.1	3.3	0.4	0.1	0.2	0.2	0.1	0.2	0.4
(캐나다)	0.9	0.1	1.8	0.4	0.1	1.0	0.1	0.1	0.1	0.4	0.4	0.2	0.1	0.1	0.1	0.1	0.3	0.7

주: 산업코드별 산업명은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WIOD)이용 계산

〈표 3-7〉 일본 주요 서비스업 생산물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연관 구조(2014)

구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7	48	49	50	51	52	53	54	55
브라질	0.4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2	0.4	0.6	2.2	5.1	0.5	0.4	0.4	1.8	1.1	0.5	0.8	0.7	0.7	0.4	0.4	0.4	0.2	0.3	0.1	0.5	0.1	0.4	0.3	0.9	0.4	1.0	0.7	0.3
독일	0.0	0.1	0.2	0.3	0.6	0.1	0.1	0.1	1.0	0.1	0.1	0.1	0.1	0.1	0.1	0.1	0.1	0.0	0.1	0.0	0.1	0.0	0.1	0.1	0.2	0.1	1.1	0.1	0.1
프랑스	0.0	0.0	0.1	0.1	0.2	0.0	0.0	0.1	0.4	0.2	0.0	0.1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7	0.0	0.0
영국	0.0	0.1	0.1	0.1	0.2	0.1	0.1	0.3	0.3	0.6	0.1	0.1	0.1	0.1	0.1	0.1	0.2	0.1	0.1	0.1	0.1	0.0	0.2	0.1	0.3	0.1	0.3	0.1	0.1
인도	0.1	0.0	0.1	0.1	0.1	0.1	0.1	0.2	0.1	0.2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1	0.0	0.1	0.0
일본	51.5	97.4	94.3	84.3	85.6	95.0	96.1	92.0	77.8	85.8	95.4	92.8	94.6	95.1	96.8	95.8	96.0	97.5	96.2	98.3	94.6	98.3	95.8	97.1	93.2	95.2	88.9	94.7	97.2
한국	0.3	0.2	0.5	0.8	1.2	0.5	0.4	0.9	1.2	1.2	0.4	0.5	0.2	0.2	0.3	0.2	0.4	0.2	0.3	0.1	0.6	0.1	0.4	0.2	0.5	0.4	0.4	0.5	0.3
러시아	3.1	0.0	0.0	0.5	0.0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0.5	0.2	0.6	0.7	1.1	0.6	0.4	1.3	3.2	3.8	0.4	1.5	0.8	1.2	0.4	0.4	0.5	0.4	0.4	0.1	0.6	0.3	0.5	0.3	1.3	0.5	1.7	0.6	0.3
기타	43.8	1.5	3.4	10.7	6.0	3.2	2.4	4.7	14.1	6.8	2.9	3.9	3.2	2.4	1.9	3.0	2.3	1.5	2.6	1.2	3.2	1.1	2.6	1.9	3.4	3.3	5.8	3.1	1.7
(호주)	6.3	0.0	0.1	1.1	0.0	0.0	0.0	0.1	0.1	0.1	0.1	0.0	0.3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0	0.1	0.1	0.1
(캐나다)	0.6	0.0	0.0	0.5	0.1	0.0	0.0	0.0	0.1	0.1	0.2	0.1	0.3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3	0.1	0.0

주: 산업코드별 산업명은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WIOD)이용 계산

2) 한일 양국의 최종재 수요에 있어 상호의존관계

한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생산과정에 있어서 뿐만 각국의 소비와 투자(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의존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표 3-8>은 2014년 기준 주요국들의 소비와 투자 수요의 국가별 조달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을 예로 들면 2014년 소비와 투자수요의 90.7%는 국내산으로 충족되었으며, 2.2%는 중국, 1.4%는 독일, 1.3%는 미국, 그리고 1.0%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충족되었다. 또한 한국의 소비와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소비보다는 투자과정에 있어서 더 높았다(<표 3-3> 참조).

<표 3-8> 한일 양국의 소비 및 투자 수요에 대한 국가별 조달구조(2014)

(단위: %)

구분	일본		한국	
	소비 및 투자 수요	소비 및 투자 공급	소비 및 투자 수요	소비 및 투자 공급
브라질	0	0.1	0	0.2
중국	2.5	0.6	2.2	0.7
독일	0.4	0.3	1.4	0.1
프랑스	0.1	0.1	0.7	0.1
영국	0.1	0.1	0.3	0.2
인도	0	0.2	0	0.2
일본	94.9	94.9	1	0.3
한국	0.3	1	90.7	90.7
러시아	0	0.3	0	0.4
미국	0.4	0.6	1.3	0.3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이용 계산

한편 일본의 소비와 투자 수요 중 자체 조달비율은 94.9%로 한국의 90.7%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달리 말해 일본이 한국에 비해 소비 및 투자 수요 충족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와 투자 수요 충족에 있어서의 일본의 해외의존도

(수입의존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2.5%), 독일 및 미국에 대한 의존도(각각 0.4%)에 이어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0.3%에 불과했다. 즉 소비 및 투자 등 최종재 수요 충족에 있어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관계를 비율이 아닌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소비와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의 소비와 투자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보다 많았다(〈부표 2〉 참조).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양국 간 상호의존관계가 변함이 없다면, 이는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상호 교역량이 비례적으로 축소될 경우, 일본의 손실이 한국의 손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상기에서 살펴본 양국의 중간재 의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상품의 수요처로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관계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 상대국이 시장으로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기로 한다. 〈표 3-9〉는 주요국의 총생산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수요되는지 즉 어떤 국가로 얼마만큼 판매(수출)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총생산 중 79.5%가 국내에서 수요되었고 중국으로 5.0%, 미국으로 2.3%, 일본으로 1.3%가 수출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총생산 중 90.6%가 일본 내에서 수요되었고, 중국으로 1.5%, 미국으로 1.4%, 한국으로 0.7% 수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과정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서의 해외의존도 역시 한국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주요국의 총생산(중간재+최종재)에 대한 국가별 수요구조(2014)

구분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판매대상국	총생산	총생산	총생산	총생산
브라질	0.1	0.4	0.1	0.1
중국	1.5	5	92.4	0.4

구분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판매대상국	총생산	총생산	총생산	총생산
독일	0.2	0.3	0.3	0.3
프랑스	0.1	0.1	0.1	0.2
영국	0.1	0.2	0.2	0.2
인도	0.1	0.4	0.1	0.1
일본	90.6	1.3	0.5	0.2
한국	0.7	79.5	0.3	0.1
러시아	0.2	0.4	0.2	0
미국	1.4	2.3	1.1	93.8

출처: WIOD 이용 계산(김완중 2019 재인용).

또한 생산물의 해외 수출에 있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물 중 중간재로 수요(판매)되는 것만 분리하여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호의존관계는 중간재 판매에 있어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10〉 참조).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다는 것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액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27.6%(122억 달러)나 더 많았다(〈부표 2〉 참조).

〈표 3-10〉 한일 양국의 중간재 생산에 대한 국가별 수요구조(2014)

구분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판매대상국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브라질	0.1	0.4	0.1	0.2
중국	2.1	5.7	94.3	0.5
독일	0.3	0.3	0.2	0.4
프랑스	0.1	0.1	0.1	0.3
영국	0.2	0.2	0.1	0.3
인도	0.2	0.5	0.1	0.1
일본	87.9	1.5	0.3	0.3

구분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판매대상국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중간재생산
한국	1.2	78.5	0.4	0.2
러시아	0.1	0.4	0.1	0
미국	1.5	2.2	0.6	90.6

출처: WIOD 이용 계산

한편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 보다 많은 부분이 중간재 부문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상을 정리하면, 양국 중 교역을 통한 이익은 일본이 더 크게 보고 있는 바,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상호 교역이 비례적으로 축소될 경우 수출에 있어 일본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구조를 볼 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 수단은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보다는 중간재 수입 축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수입(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일본 수출규제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1) 분석방법 및 자료

본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의 ICT 관련 분야의 세계 수출감소, 그리고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내수침체가 양국과 세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세계투입산출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총수요(소비, 투자, 수출)의 부가가치효과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식에서 VA는 총수요 구성요소들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 벡터, e 는 부가가치벡터, B 는 투입계수행렬이며, 그리고 C , K , X 는 각각 소비, 고정자본형성(투자), 수출을 의미한다.

$$VA_C = e \cdot (I - B)^{-1} \cdot C \quad (1)$$

$$VA_K = e \cdot (I - B)^{-1} \cdot K \quad (2)$$

$$VA_X = e \cdot (I - B)^{-1} \cdot X \quad (3)$$

설명의 편의를 위해 3개국(r 국, s 국, t 국)으로 구성된 세계투입산출표를 가정하자. 어떤 한 국가(r 국)의 소비가 전세계(r 국, s 국, t 국)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식 (1)에 따라 식 (4)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식 (4)의 우측 각각의 항은 식 (1)의 우측 각각의 항에 해당된다. 식 (4)에서 좌측의 VA 는 r 국 소비에 따른 세계부가가치 창출액을 의미하고, 우측의 C_{rr} , C_{rs} , C_{rt} 는 각각 r 국의 소비 중 r 국 생산품, s 국 생산품, t 국 생산품에 대한 소비를 의미한다. 식 (4)에서 가운데 매트릭스는 식 (1)에서 $(I-B)^{-1}$ 행렬의 구성요소들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국가(r 국)의 투자(K)나 수출(X)이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식 (2)와 식 (3)에 따라 식 (5)와 식 (6)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식 (6)은 어떤 한 국가(r 국)의 對세계 수출이 세계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X_{rw} 는 r 국의 對세계 수출을 의미한다. 식 (6)은 어떤 한 국가(r 국)의 對세계 수출에 따른 r 국 자체의 부가가치창출 효과와 r 국 수출품 생산과정에서의 여타 국가로부터의 생산요소 수입에 따른 여타 국가의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반영한다.

$$VA_C = \begin{pmatrix} e^r & 0 & 0 \\ 0 & e^s & 0 \\ 0 & 0 & e^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L^{rr} & L^{rs} & L^{rt} \\ L^{sr} & L^{ss} & L^{st} \\ L^{tr} & L^{ts} & L^{t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C^{rr} \\ C^{rs} \\ C^{rt} \end{pmatrix} \quad (4)$$

$$VA_k = \begin{pmatrix} e^r & 0 & 0 \\ 0 & e^s & 0 \\ 0 & 0 & e^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L^{rr} & L^{rs} & L^{rt} \\ L^{sr} & L^{ss} & L^{st} \\ L^{tr} & L^{ts} & L^{t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K^{rr} \\ K^{rs} \\ K^{rt} \end{pmatrix} \quad (5)$$

$$VA_x = \begin{pmatrix} e^r & 0 & 0 \\ 0 & e^s & 0 \\ 0 & 0 & e^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L^{rr} & L^{rs} & L^{rt} \\ L^{sr} & L^{ss} & L^{st} \\ L^{tr} & L^{ts} & L^{tt} \end{pmatrix} \cdot \begin{pmatrix} X^{rw} \\ 0 \\ 0 \end{pmatrix} \quad (6)$$

아래 2절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양국과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기 식 (4)~식 (6)을 통해서 계산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양국과 여타 국가들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식 (6)을 이용하여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감소(일본의 한국산 제품 불매결과)¹⁵⁾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감소(한국의 일본산 제품 불매결과)¹⁶⁾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부품소재 통제로 인해 한국의 ICT 관련 분야의 수출감소에 따른 세계 부가가치 영향분석 역시 식 (6)을 활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의 내수침체가 예상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영향은 식 (4)와 식 (5)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계투입산출표는 세계 43개 국가와 기타국가(The rest of the World)가 생산과 수요에 있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데, 포괄하고 있는 산업 수는 국별로 56개이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중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에 해당되는 2014년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다.

15) 일본의 소비자나 투자 중 한국제품으로 충당된 것 중 일정 비율만큼이 불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제품들에 있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한국의 소비자나 투자 중 일본제품으로 충당된 것 중 일정 비율만큼이 불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제품들에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과 일본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상호의존관계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갈등이 양국과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11>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일본)의 최종수요가 창출한 국가별 부가가치와 그것이 각 국가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최종수요에 의해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957억 달러), 미국(502억 달러), 일본(431억 달러), 독일(243억 달러)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431억 달러로 일본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0%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1,633억 달러), 미국(751억 달러), 호주(445억 달러), 한국(316억 달러), 러시아(313억 달러) 순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액은 316억 달러로 한국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상대국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높았다. 즉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국가는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공히 중국과 미국이었다. 또한 부가가치 절대액에서는 이들 국가에 비해 적으나,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각국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즉 한국과 일본경제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는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경제(부가가치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이지만 양국이 세계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9.7%에 달하는 바, 이는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한국과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3-11〉 한일 양국의 부가가치 상호의존관계 및 세계경제의 영향력

(단위: 억 달러, %)

구분	한국의 최종수요가 세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비중	일본의 최종수요가 세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비중	세계부가가치 중 각국 비중
Japan	431	1.0	44,482	100	6.0
Korea	12,917	100	316	2.5	1.7
세계전체	18,352	2.5	53,070	7.2	100.0

주: 비중은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된 각국의 부가가치가 해당국가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세계투입산출표 자료(WIOD) 이용 계산.

3) 양국 간 무역분쟁이 한·일 및 세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효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러한 불매운동이 일본과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본 연구는 그러한 불매운동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축소된 수요가 국내나 여타 국가 제품으로 대체되고(즉 한국의 총수요는 변함이 없고), 단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만 감소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즉 일본으로부터의 한국 수입 축소에 따른 일본의 수출감소가 일본과 세계 부가가치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⁷⁾. 만약 한국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전산업에 있어서 10%씩 축소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부가가치는 약 37억 9천만 달러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2〉 참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감소는 일본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여타 각국의 부가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10% 수출감소는 일본과 국제적 분업관계에 있는 중국의 부가가치를 1억 8천만 달러, 한국의 부가가치를 약 6천만 달러 감소시키는 등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부가가치를 총 15억 6천만 달러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17)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감소(일본의 대한국 수출감소)가 한국의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 바, 그러한 경우는 분석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따르면 한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가 확대되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30% 축소될 경우, 일본 자체 부가가치는 113억6천만 달러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일본의 총부가가치는 0.26% 축소될 것이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불매운동이 어떤 산업에 집중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분석의 편의상 모든 산업에 대해 균일하게 10%씩 불매가 될 경우 일본의 산업별 부가가치 손실액 크기는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 1차 금속제품(15), 도매업(자동차제외)(29),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4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 순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즉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각 산업에서 균일하게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일본 산업 중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산업은 컴퓨터, 전자·광학제품(세계투입산출표 상 산업 17)인데, 해당 산업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는 품목이 속해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응하여 일본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경우, 한국과 여타 세계 부가가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영향은 불매운동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국 불매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상기 한국의 불매운동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한국의 전제품에 대해 10%씩 불매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산업에서 10%씩 감소한 경우인데, 그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4억 7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이는 2014년 한국 총부가가치의 약 0.2%에 해당된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감소는 국제분업구조 상 한국과 생산분업 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부가가치는 약 2억 2천만 달러 감소하고, 다음으로 일본이 1억 1천만 달러, 미국이 1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등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부가가치가 약 16억 8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불매운동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석의 편의상 모든 분야에 대해 균일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즉 일본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각 산업별로 10%씩 감소할 경우, 부가가치가 많이 줄어드는 한국 산업은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 1차금속제품(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 금속가공제품(16),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49) 순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경우, 양국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관계에 있는 여타 모든 국가들의 부가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국의 불매운동의 양상(불매대상 및 정도)이 같을 경우, 부가가치 측면에서 한국의 손실액보다 일본의 손실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제품 불매운동은 양국과 가장 긴밀한 국제분업관계에 있는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의 부가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동일한 양상으로 일어날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감소폭은 양국 동일하게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 1차 금속제품(15)에서 가장 컸다.

〈표 3-12〉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각국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 영향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 영향	비중	한국 ICT 산업 세계 수출10% 감소영향	비중	한국 소비와 투자, ICT 산업 세계 수출 10% 감소영향	비중
Australia	78	0.006	129	0.009	104	0.008	978	0.072
Austria	4	0.001	3	0.001	18	0.005	134	0.034
Belgium	5	0.001	5	0.001	18	0.004	142	0.030
Bulgaria	1	0.001	0	0.001	2	0.004	16	0.033
Brazil	19	0.001	22	0.001	36	0.002	383	0.018
Canada	23	0.001	25	0.001	49	0.003	412	0.025
Switzerland	8	0.001	9	0.001	48	0.007	300	0.044
China	216	0.002	184	0.002	1,586	0.015	7,225	0.070
Cyprus	0	0.001	0	0.001	0	0.002	3	0.015
Czech Rep.	2	0.001	1	0.001	7	0.004	67	0.036
Germany	42	0.001	36	0.001	211	0.006	1,880	0.054
Denmark	3	0.001	3	0.001	12	0.004	111	0.037
Spain	8	0.001	8	0.001	23	0.002	232	0.018
Estonia	0	0.001	0	0.001	1	0.004	9	0.039

18) 이는 한일 양국의 불매운동 자체에 따른 효과이며, 만약 양국의 불매운동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중국의 부가가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대체관계는 상정하지 않았다.

구분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 영향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 영향	비중	한국 ICT 산업 세계 수출10% 감소영향	비중	한국 소비와 투자, ICT 산업 세계 수출 10% 감소영향	비중
Finland	3	0.001	3	0.001	13	0.005	121	0.052
France	18	0.001	15	0.001	70	0.003	762	0.030
United Kingdom	31	0.001	22	0.001	86	0.003	801	0.030
Greece	2	0.001	2	0.001	5	0.002	35	0.017
Croatia	0	0.001	0	0.001	1	0.003	9	0.019
Hungary	1	0.001	1	0.001	4	0.004	50	0.043
Indonesia	42	0.005	55	0.006	80	0.009	693	0.080
India	15	0.001	13	0.001	43	0.002	339	0.017
Ireland	4	0.002	4	0.002	16	0.007	135	0.059
Italy	13	0.001	9	0.000	46	0.002	565	0.029
Japan	113	0.003	3,787	0.085	712	0.016	3,005	0.068
Korea	2,468	0.192	59	0.005	10,533	0.818	97,588	7.582
Lithuania	0	0.001	0	0.001	2	0.003	10	0.024
Luxembourg	1	0.002	1	0.002	3	0.005	20	0.035
Latvia	0	0.001	0	0.001	1	0.003	8	0.027
Mexico	13	0.001	7	0.001	25	0.002	211	0.017
Malta	0	0.001	0	0.001	0	0.004	2	0.020
Netherlands	11	0.001	10	0.001	43	0.005	307	0.039
Norway	10	0.002	10	0.002	34	0.007	298	0.066
Poland	4	0.001	3	0.001	15	0.003	143	0.030
Portugal	1	0.001	1	0.001	5	0.002	31	0.015
Romania	1	0.001	1	0.001	5	0.003	48	0.027
Russia	60	0.004	92	0.006	106	0.007	879	0.054
Slovak Rep.	1	0.001	1	0.001	3	0.003	33	0.036
Slovenia	0	0.001	0	0.001	2	0.004	13	0.031
Sweden	5	0.001	5	0.001	22	0.004	198	0.039
Turkey	5	0.001	4	0.001	14	0.002	114	0.016
Taiwan	26	0.005	36	0.007	306	0.060	752	0.147
United States	105	0.001	106	0.001	506	0.003	3,768	0.022
Rest of World	788	0.007	778	0.007	1,611	0.015	11,245	0.105
총계	4,152	0.006	5,451	0.007	16,424	0.022	134,077	0.182

주: 비중은 각국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 이용 계산.

〈표 3-13〉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양국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산업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 영향 (일본VA)	일본 산업VA 비중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영향 (한국 VA)	한국 산업 VA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영향 (일본 VA)	일본 산업 VA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영향 (한국 VA)	한국 산업 VA 비중
1	0.42	0.001	59	0.232	16	0.034	0.3	0.001
2	0.20	0.004	3	0.164	6	0.133	0.0	0.002
3	0.07	0.001	6	0.226	3	0.035	0.0	0.001
4	1.25	0.015	17	0.707	33	0.398	0.5	0.022
5	0.96	0.001	50	0.299	39	0.029	0.2	0.001
6	0.83	0.006	70	0.341	31	0.212	0.9	0.005
7	0.16	0.002	4	0.217	6	0.085	0.1	0.004
8	1.49	0.007	20	0.354	52	0.236	0.4	0.007
9	0.93	0.003	4	0.154	32	0.117	0.1	0.003
10	5.69	0.010	65	0.738	170	0.312	1.8	0.020
11	8.47	0.030	186	0.432	231	0.807	8.2	0.019
12	0.34	0.001	14	0.168	21	0.060	0.1	0.001
13	4.97	0.014	33	0.519	190	0.519	0.8	0.012
14	2.77	0.011	18	0.381	121	0.490	0.4	0.008
15	16.21	0.028	233	0.750	390	0.679	9.3	0.030
16	4.89	0.008	163	0.559	192	0.325	2.3	0.008
17	13.25	0.014	285	0.328	458	0.487	7.0	0.008
18	2.31	0.006	115	0.506	116	0.313	1.8	0.008
19	2.95	0.004	71	0.213	224	0.306	1.4	0.004
20	1.11	0.001	32	0.087	71	0.078	0.5	0.001
21	0.37	0.001	38	0.146	21	0.081	0.6	0.002
22	0.87	0.005	13	0.228	33	0.198	0.3	0.005
23	0.00	N.A.	0	N.A.	N.A.	N.A.	0.0	N.A
24	2.05	0.005	60	0.227	62	0.135	1.8	0.007
25	0.41	0.002	6	0.132	13	0.066	0.2	0.004
26	0.28	0.002	19	0.369	9	0.061	0.6	0.012
27	1.22	0.000	4	0.006	38	0.013	0.1	0.000
28	1.76	0.004	15	0.216	56	0.117	0.3	0.005
29	8.39	0.003	103	0.219	238	0.074	2.4	0.005

산업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 영향 (일본VA)	일본 산업VA 비중	일본의 대한국 10% 불매영향 (한국 VA)	한국 산업 VA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영향 (일본 VA)	일본 산업 VA 비중	한국의 대일본 10% 불매영향 (한국 VA)	한국 산업 VA 비중
30	1.40	0.001	125	0.219	47	0.021	2.9	0.005
31	3.39	0.003	46	0.199	100	0.078	1.2	0.005
32	1.16	0.007	14	0.308	17	0.098	0.5	0.011
33	0.20	0.001	17	0.352	6	0.040	0.3	0.005
34	1.04	0.003	37	0.279	31	0.092	1.0	0.007
35	0.27	0.002	3	0.162	9	0.076	0.1	0.004
36	1.73	0.001	33	0.099	56	0.041	0.7	0.002
37	0.36	0.003	12	0.111	12	0.100	0.3	0.002
38	0.62	0.003	17	0.075	21	0.102	0.4	0.002
39	1.16	0.001	9	0.145	38	0.041	0.2	0.003
40	1.41	0.002	7	0.076	47	0.053	0.2	0.002
41	4.23	0.003	61	0.124	133	0.089	1.5	0.003
42	0.51	0.001	9	0.071	15	0.026	0.2	0.002
43	0.00	N.A.	9	0.099	N.A.	N.A.	0.2	0.003
44	0.89	0.000	50	0.050	28	0.005	1.1	0.001
45	0.00	N.A.	20	0.180	N.A.	N.A.	0.5	0.005
46	0.00	N.A.	21	0.114	N.A.	N.A.	0.7	0.004
47	0.25	0.002	7	0.028	10	0.077	0.2	0.001
48	0.56	0.004	4	0.268	18	0.147	0.1	0.005
49	6.04	0.003	154	1.358	231	0.109	1.4	0.012
50	1.21	0.003	62	0.202	42	0.104	1.6	0.005
51	0.74	0.000	5	0.005	23	0.006	0.1	0.000
52	0.18	0.000	10	0.013	6	0.004	0.2	0.000
53	0.25	0.000	9	0.016	9	0.003	0.2	0.000
54	0.56	0.000	22	0.063	19	0.013	0.4	0.001
55	0.14	0.004	0	N.A.	5	0.123	0.0	N.A.
56	0.00	N.A.	0	N.A.	N.A.	N.A.	0.0	N.A.
전산업	112.91	0.003	2,468	0.192	3,787	0.085	58.5	0.005

주: 산업별 코드는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이용 계산.

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세계 부가가치에 주는 영향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본 양국 간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7월에 발표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일부 부품소재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부 핵심 부품소재의 조달 차질은 해당 제품의 생산과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2018년부터 20%대)을 고려할 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분야의 한국 수출 역시 어느 정도는 축소된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이 축소될 경우,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들의 생산과 수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번 조치로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축소될 것인지, 즉 예상되는 수출 축소 폭 크기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해당분야의 수출축소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양국과 국제분업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절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 등 넓은 의미의 ICT 관련 산업(세계투입산출표에서는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에 해당)에 있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여타 세계 국가들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⁹⁾.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한국의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의 對 세계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가가치는 약 10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뿐만 아니라 한국과 긴밀한 국제분업 관계에 있는 중국의 부가가치도 약 16억 달러 감소하며, 일본(7억 달러), 미국(5억 달러), 대만(3억 달러)의 부가가치도 감소하는 등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에 있어서의 對세계 수출 감소에 따른 세계 부가가치 감소의 약 66%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나머지 34%는

19) 물론 한국의 해당 제품들에 대한 세계 수출이 중국 등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그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축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그러한 상황까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국제분업 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 제약 상 세계투입산출표가 이용 가능한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국제분업은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의 해당 분야 수출감소에 따른 여타 국가들의 부가가치 감소 정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연관산업 부가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 소매업(자동차 제외)(30), 도매업(자동차 제외)(29), 금속가공제품(16) 순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해당 산업의 수출감소 시 부가가치 감소는 해당산업에서 약 61%, 여타 연관산업에서 약 39%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의 수출 감소는 일본의 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컴퓨터, 전자·광학제품(17)에 있어서의 양국 간 분업관계로 인해 일본 역시 해당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 감소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양국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 크기와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한국 VA)	한국산업 VA 비중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일본 VA)	일본산업 VA 비중
1	33	0.130	2	0.005
2	5	0.252	1	0.020
3	4	0.128	0	0.005
4	14	0.564	5	0.062
5	26	0.154	5	0.004
6	82	0.400	4	0.026
7	10	0.614	1	0.013
8	38	0.678	7	0.033

산업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한국 VA)	한국산업 VA 비중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일본 VA)	일본산업 VA 비중
9	17	0.605	6	0.023
10	34	0.385	19	0.035
11	381	0.885	34	0.118
12	13	0.160	2	0.005
13	58	0.907	34	0.093
14	90	1.936	29	0.117
15	144	0.463	35	0.061
16	229	0.783	23	0.040
17	6,466	7.437	224	0.238
18	202	0.890	18	0.048
19	104	0.315	13	0.018
20	29	0.079	5	0.005
21	70	0.266	2	0.007
22	76	1.350	6	0.036
23	N.A.	N.A.	N.A.	N.A.
24	165	0.628	10	0.022
25	14	0.291	2	0.012
26	25	0.500	1	0.010
27	21	0.033	6	0.002
28	40	0.589	10	0.021
29	274	0.584	46	0.014
30	336	0.584	9	0.004
31	134	0.582	18	0.014
32	1	0.015	4	0.021
33	14	0.283	1	0.008
34	118	0.882	5	0.015
35	8	0.456	2	0.014
36	89	0.268	11	0.008

산업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한국 VA)	한국산업 VA 비중	한국의 ICT 산업 10% 수출감소 영향(일본 VA)	일본산업 VA 비중
37	37	0.347	2	0.019
38	39	0.170	4	0.018
39	28	0.435	7	0.008
40	54	0.581	9	0.011
41	206	0.416	24	0.016
42	28	0.211	3	0.004
43	33	0.369	N.A.	N.A.
44	135	0.136	5	0.001
45	77	0.702	N.A.	N.A.
46	122	0.673	N.A.	N.A.
47	74	0.289	2	0.015
48	8	0.557	3	0.025
49	39	0.340	34	0.016
50	171	0.558	8	0.020
51	12	0.012	4	0.001
52	28	0.039	1	0.001
53	27	0.049	2	0.001
54	54	0.151	3	0.002
55	N.A.	N.A.	1	0.021
56	N.A.	N.A.	N.A.	N.A.
전산업	10,533	0.818	712	0.016

주: 산업별 코드는 <부표 1> 참조.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이용 계산.

4)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확산 : 한국내수 침체 효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무역갈등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의 ICT관련 산업의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양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될수록 양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불매운동과 수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은 앞에서 분석한 것 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에 국한하여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으로 ICT 산업관련 수출감소와 동시에 한국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침체가 발생할 경우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앞 절의 상황별 효과와의 비교를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의 ICT관련 산업의 수출과 내수(소비와 투자)가 각각 10%씩 감소할 경우,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ICT 관련 산업의 수출과 내수(소비와 투자)가 각각 10%씩 감소하면, 한국의 부가가치는 약 976억 달러 감소하고, 중국(72억 달러), 미국(38억 달러), 일본(30억 달러), 독일(19억 달러), 러시아(9억 달러) 순으로 여타 국가들의 부가가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2014년 기준으로 총부가가치의 7.6%가 감소하고, 세계적으로도 총부가가치가 약 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제규모가 세계 3위이고 한국의 3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해 일본 내 내수가 침체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내수 침체에 비해 훨씬 클 것은 자명하다.

제4장 동북아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충남지역 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영향

충남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하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무역질서 편입 과정에서 국제무역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원자재를 수입하여 미국과 유럽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구조를 구축하였다. 충남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공급자인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며 중국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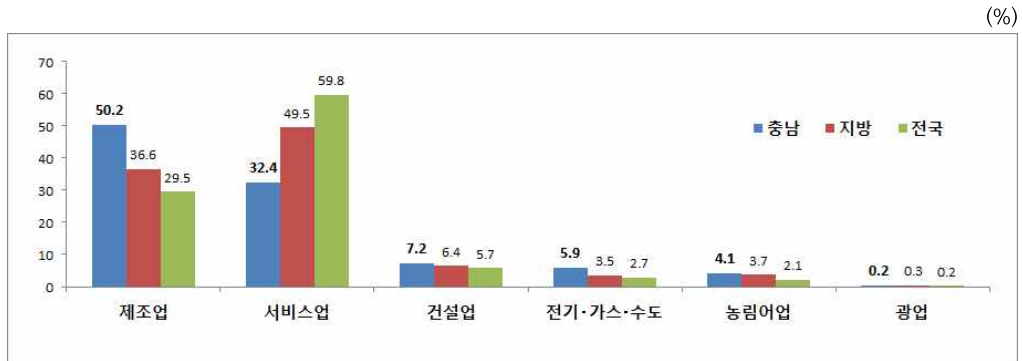
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충남지역 제조업 비중은 50.2%(2016년 기준, 세종 포함)로 전국(29.5%) 및 지방 평균(36.6%, 수도권 제외)을 상회한다. 반면, 서비스업은 32.4%로 전국(59.8%) 및 지방 평균(49.5%, 수도권 제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상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무역감소로 인한 타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충남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내 세부 품목의 비중(2016년 기준)은 전자·영상·통신장비 29.0%(전국 22.7%), 자동차 12.2%(전국 11.2%), 화학물질·화학제품 10.2%(전국 8.7%), 기타 기계장비 6.7%(전국 7.8%) 등이다. 이는 충남지역이 수도권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이 집적화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ICT 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일본수출규제의 충격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전달되는 주요경로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충남지역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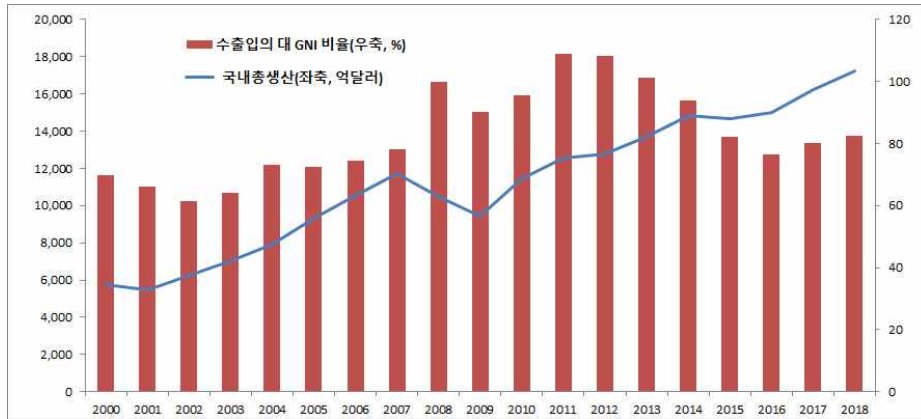


주: 1) 2016년 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2)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자료: 통계청

나. 중국 중심의 높은 무역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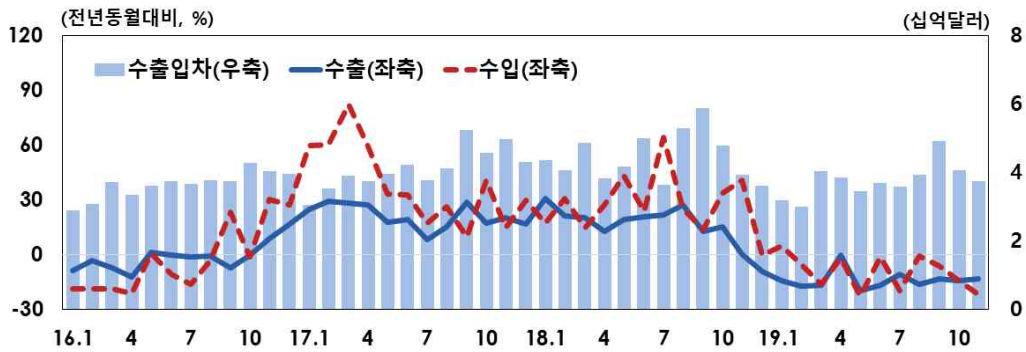
충남지역 제조업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하여, 수출대기업이 소재한 울산 및 중국 무역항 소재지인 인천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역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0% 수준까지 높아진 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충남지역은 무역의존도가 금융위기 전후로 이미 100% 넘는 수준을 보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는 약 87.9%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 경제가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한중 제조업 글로벌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가 충남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그림 4-2〉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주1: GNI대비 상품 수출입 비율
 자료: 한국은행ECOS, 한국무역협회

〈그림 4-3〉 충남지역 수출입 증감률 및 수출입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9) 재인용

〈표 4-1〉 충남지역 수출입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백만달러)

구분	〈비중 ¹⁾ 〉	2018년				
		1/4	2/4	3/4	4/4	연간
■ 수출		23.7	17.5	20.1	1.8	15.2
수출액(A)		22,415	22,621	24,394	22,538	91,968
반도체	〈47.2〉	43.6	26.3	28.4	1.6	23.3
평판디스플레이	〈12.1〉	-19.2	-24.2	3.7	-8.8	-11.6
석유화학제품	〈 7.4〉	2.5	28.6	17.6	16.7	15.7
컴퓨터	〈 6.1〉	78.5	44.3	-6.7	-43.4	11.4
자동차및자동차부품	〈 2.8〉	-18.8	-16.5	-20.8	-33.1	-22.5
■ 수입		20.0	30.9	33.6	23.2	26.7
수입액(B)		9,153	9,641	9,605	10,248	38,647
원유	〈46.7〉	25.1	46.1	57.9	17.6	34.3
유연탄	〈 9.0〉	0.5	28.2	0.4	5.0	7.9
나프타	〈 7.0〉	91.5	84.4	201.0	247.1	153.2
정밀화학원료	〈 5.8〉	171.0	111.9	62.5	76.6	96.3
수출입차(A-B)		13,262	12,980	14,789	12,290	53,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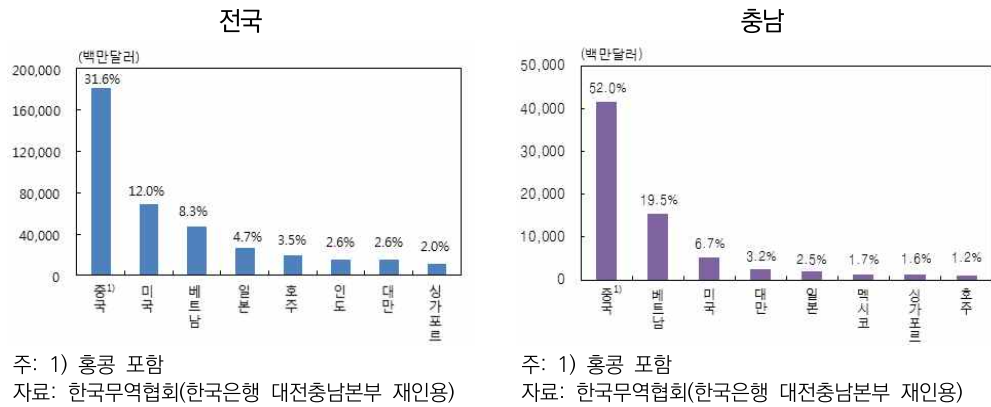
주: 1) 〈 〉 내는 2018년중 해당 품목의 수출(입)액이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9) 재인용

충남의 주요 수출국 중 중국(홍콩 포함)의 비중은 52.0%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베트남도 19.5%로 높은 수준이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조업 중간재 공급역할을 담당하는 중이다. 2015년 충남의 對중국 교역액은 328억 달러(전국대비 14.4%)로 2000년 대비 15배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268억 달러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31.6%, 홍콩 포함), 미국(12.0%), 베트남(8.3%), 일본(4.7%) 순이다. 충남의 경우 미국의 비중이 6.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신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과정에 미중무역전쟁의 충격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의 수출감소로 인한 충남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강한 연결선상에 있다. 따라서 충남은 국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미중무역전쟁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국가별 수출현황(2017년)



다. 중간재 중심의 수출

충남의 지역 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충남은 중간재('15년 기준 충남 對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 69.4%)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충남지역의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7년 충남지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82.4% 수준에 달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66.2%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남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충남의 높은 중간재 비중은 높은 무역의존도와 함께 충남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충남지역 경제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배경을 살피고 미중무역전쟁이 글로벌 패권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배경과 향후 양국 간 무역갈등 상황전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수출분쟁이 지역경제의 주도권 다툼으로 나타나는 유사성이 있음을 추론하였다. 즉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 내 총선과 같은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북아지역내에서 경제적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한국 견제 등 국제정치경제학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9년 7월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같은 방식의 한국견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의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나아가 일본의 한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 ICT관련 산업의 세계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불매운동보다는 한국 ICT 관련 분야의 수출감소가 양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같은 양상(불매 분야 및 정도)으로 전개된다면, 절대적인 부가가치액에서는 일본의 손실이 한국보다 크나, 각국의 총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 감소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불매운동, ICT관련 수출감소)도 많지만, 이러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됨으로 인해 양국의 내수가 침체될 경우 그 부작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국에 모두 손해인 양국 간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국내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정쟁을 야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갈등은 양당사국뿐만 아니라,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국제무역 및 분업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국제사회도 양국 간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충남의 경우 첫째 중간재 수출 중심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제조업 중 ICT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동북아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중무역전쟁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위치에 의하면 충남지역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다른 지역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표 1〉 WIOD 산업코드와 산업명

코드	산업명
.	1차산업
1	농업
2	임업
3	어업
4	광업
.	제조업
5	식료품, 음료, 담배
6	섬유제품, 의복, 가죽·가방·신발
7	목재제품
8	종이 및 종이제품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2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코드	산업명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4	비금속광물제품
15	1차금속제품
16	금속가공제품
17	컴퓨터, 전자·광학제품
18	전기장비
19	기타기계 및 장비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기타운송장비
22	가구, 기타제품
23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서비스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5	수도업
2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7	건설업
28	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
29	도매업(자동차 제외)
30	소매업(자동차 제외)
3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2	수상운송업
33	항공운송업
3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35	우편, 배달업
36	숙박, 음식점 및 주점업
37	출판업
3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9	통신업
4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
41	금융업(보험 및 연금 제외)
42	보험 및 연금업
4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44	부동산업
45	법률·회계·경영자문

코드	산업명
4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과학 서비스
47	과학 연구개발
48	광고 및 시장조사업
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0	사업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	교육서비스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	기타서비스업
5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소비생산활동
56	국제 및 외국기관

〈부표 2〉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최종재(소비 및 자본재) 조달 구조(2014)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일본			한국		
	중간재	소비 및 투자	총수입	중간재	소비 및 투자	총수입
Australia	42,141	4,131	46,272	14,547	1,511	16,058
Austria	1,198	866	2,064	1,026	497	1,523
Belgium	1,476	771	2,247	1,128	382	1,510
Bulgaria	30	28	58	81	34	115
Brazil	6,654	2,400	9,054	3,844	498	4,341
Canada	10,796	3,250	14,046	3,975	727	4,702
Switzerland	4,526	2,650	7,176	1,919	1,232	3,151
China	67,442	105,419	172,861	74,235	27,689	101,924
Cyprus	1	0	1	2	1	4
Czech Rep.	448	235	682	407	277	684
Germany	12,429	12,328	24,757	13,656	11,759	25,415
Denmark	1,943	1,519	3,461	872	443	1,315
Spain	2,112	1,746	3,858	1,975	1,113	3,088
Estonia	101	25	126	80	28	108
Finland	1,411	472	1,882	1,387	606	1,993
France	5,113	6,300	11,413	4,504	5,740	10,244
United Kingdom	6,762	3,157	9,919	6,995	2,699	9,694
Greece	178	26	203	327	113	440
Croatia	16	58	73	10	9	19
Hungary	227	616	842	355	299	654
Indonesia	19,819	5,546	25,365	8,999	1,662	10,661

구분	일본			한국		
	중간재	소비 및 투자	총수입	중간재	소비 및 투자	총수입
India	3,831	1,814	5,644	4,535	691	5,226
Ireland	1,431	1,039	2,470	1,201	514	1,715
Italy	3,595	4,918	8,513	4,001	3,274	7,275
Japan	3,565,446	4,285,775	7,851,221	48,144	8,305	56,449
Korea	30,635	13,600	44,235	1,593,120	1,112,800	2,705,919
Lithuania	19	34	53	28	8	36
Luxembourg	437	205	642	30	8	38
Latvia	34	11	44	52	6	58
Mexico	1,903	2,578	4,481	2,390	513	2,903
Malta	28	66	94	23	6	29
Netherlands	1,708	1,500	3,209	1,986	1,145	3,131
Norway	1,426	826	2,252	1,668	1,687	3,355
Poland	615	408	1,023	957	357	1,314
Portugal	81	123	204	107	43	151
Romania	204	76	280	240	159	399
Russia	20,769	1,941	22,711	6,980	1,215	8,195
Slovak Rep.	39	121	160	186	146	332
Slovenia	28	22	50	77	22	99
Sweden	1,496	700	2,195	1,148	900	2,048
Turkey	320	530	850	551	209	760
Taiwan	18,774	4,930	23,704	11,232	1,082	12,314
United States	41,337	22,261	63,598	30,202	13,685	43,887
Rest of World	300,550	66,028	366,578	188,077	27,256	215,333
수입액	614,084	275,269	889,353	444,138	118,550	562,688
수입액 중 대한국(일본) 수입 비중	5.0	4.9	5.0	10.8	7.0	10.0

주: 소비는 가계 및 정부소비 지출, 투자는 고정자본형성.
출처: World Input-Output Table Database이용 계산.

참고문헌

- 김민정·배준성(2018), “보호무역 강화가 충남지역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비관세무역장벽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김완중. 2015.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변화 분석.” 『무역학회지』, 40(1): 59-87
- 김완중. 2019. 『세계경제구조와 한국』, 시그마프레스.
- 김완중. 2019.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아시아연구, 22(3), 1-46
- 김종화. 1998. “한·일간 무역수지와 산업연관관계 분석 : 수출 감응동 계수와 수입 영향력 계수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7(2): 131-15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WTO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2019.08)
- 박순찬(2009),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대상으로”, 『대외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175-201.
- 박순찬·민은지(2016), “서비스 무역장벽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22, 35-54.
- 박창귀·장은종(2009), “2008 SNA의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 『국민계정리뷰』, 2009년 제4호, 95-157
- 박천익·정군우. 2007. “동아시아의 중간재투입의존구조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 『한일경상논집』, 38: 185-209
- 백승진·김부경(2017),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신현곤. 2004. “한·중·일 철강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가 시사점.” 『POSRI 경영연구』, 4(1): 5-28

- 오태현. 2017. “일본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일 수출에 관한 연구 -의류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75: 189-210
- 왕윤중, 2016, 달러패권, 프리이코노미북스.
- 왕윤중, 2017, “신창타이 시대 홍색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18집 3호, pp. 99-152.
- 왕윤중. 2019. 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1-40.
-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2017,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시영·이상학·전성희. 2006. “한·일 FTA: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11(3): 141-163
- 이재승. 2015. “한일간 수출입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1: 409-427
- 이창수·윤미경·송백훈. 2015.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0(3): 85-108
- 이홍배. 2011.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찰.” 『동북아경제연구』, 23(1): 137-162
- 이춘근. 2016.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한·일 간 주종산업의 승수효과 분해.” 『지역산업연구』, 39(2): 157-181
- 이홍배. 2017. “한중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스피로버효과 변화 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 『비교경제연구』, 24(1): 1-30
- 이홍배·에가미사토시. 2016.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고찰 -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한일경상논집』, 72: 29-50
- 이홍배·오동윤. 2009.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생산기술격차에 따른 산업 및 무역 의존 관계 변화.” 『비교경제연구』, 16(1): 101-133
- 최낙균·박순찬(201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0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tat.go.kr)
- 한국개발연구원 KDI,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2015.09)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충남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8.06)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뉴노멀 시대 중국의 신산업정책이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5.06)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7.09)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국의 소비시장 급성장과 대전충남의 대응전략, (2016.12)
- 한국은행, 중국 경제성장이 지역고용에 미친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점검, (2017.04)
- 홍승린·이정수. 2017.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75: 75-97
- Asquith, Brian J., Sanjana Goswami, David Neumark, Antonio Rodriguez-Lopez, 2017, “U.S. Job Flows and the China Shock,” NBER Working Paper No. 24080.
- Autor, D. H., Dorn, D., and Hanson, G. H., 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Issue 6, pp. 2121-2168.
- Baldwin, Richard,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ckwell, Robert D. and Asheley J. Tellis, 2015, Revising U.S. Grand Strategy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1.
- Ebenstein, A., Harrison, A., McMillan, M., and Phillips, S., 2014, “Estimating the impact of trade and off-shoring on American workers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6,
- Fajgenbaum Pablo D., Pinelopi K. Goldberg, Patrick J. Kennedy, and Amit

- K. Khandelwal, 2019, “The Return to Protectionism,” NBER Working Paper No. 25638.
- Ferguson, Niall, 2004, *Colossus: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 Penguin.
 - Ferguson, Niall, 2011,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Penguin.
 - Hummels, D., Ishii, J. and Yi, K.-M.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1), 75-96.
 - Issue 4, pp. 581-595.
 - John W. Dower, *The San Francisco System: Past, Present, Future in U.S.-Japan-China Relation*
 - Johnson, Harry G., 1954, “Optimum Tariffs and Retali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1, pp. 142-153.
 - Kagan, Robert, 2018, *The Jungle Grows Back: America and Our Imperiled World*, Knopf.
 - Lemke, Douglas, 2002,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y, Jack and William R. Thompson, 2011, *The Arc of War: Origins, Escalation, and Transform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too, Aditya and Robert W. Staiger, 2019, “Trade Wars: What Do They Mean? Why Are They Happening Now? What Are The Costs?” NBER Working Paper No. 25762.
 - Mearsheimer, John,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orton & Company.
 - Navarro, Peter and Grey Autry, 2011,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Global Call to Action*, Pearson Education Inc.
 - Navarro, Peter, 2018, “China’s Faux Comparative Advantage,” *Wall Street*

Journal, April 15, 2018.

- Nye, Joseph S. Jr., 2015, *Is American Century Over?* Polity Press.
- Nye, Joseph S. Jr., 2017, “The Kindleberger Trap,” Project Syndicate, January 9, 2017.
- Obashi Ayako and Fukunari Kimura, 2018, “Are Production Networks Passe in East Asia? Not Yet,” *Asian Economic Papers* Vol. 17, Issue 3, pp. 86-107.
- Ossa, Ralph, 2014, “Trade Wars and Trade Talks with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12, pp. 4104-46.
- Sang In Kang, Jae Joon Kim, Tae Yong Jung, Toshihiko Masui, Junichi Fujino.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Korea-Japan Free Trad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 72,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https://comtrade.un.org>)
- UNCTAD(2013),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d Value-Added Trade in the Global Economy”, UNCTAD.
- Wang Z., S. Wei, X. Yu, and K.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 NBER Working No. 19677, NBER.
- Wang Z., S. Wei, X. Yu, and K. Zhu (2017), “Measures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 and Global Business Cycles.” NBER Working Paper No. 23222, NBER.
- Wolfers, Justin, 2018, “Trump’s Tariffs Haven’t Really Transformed Trade. Yet,” *The New York Times*, Nov. 21, 2018.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오대원 경기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19-14 ·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충남의 대응전략

글쓴이 · 오대원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9년 12월 31일 / 발행 · 201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19-7

<http://www.cni.re.kr>

© 2019.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